

정보화에 대한 반성과 방향 모색

서삼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미국에서는 요즘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미국경제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신경제(New Economy) 또는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경제의 탈규제화(deregulation), 디지털화(digitization) 및 지구촌화(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을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이에 맞는 경제원리와 운영을 기업주도로 함으로써 전혀 없는 경제성장과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호황을 장기간 구가하고 있고, 또 기업의 투자나 운영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기에는 그 실증적 증거가 약하다는 주장이다.

전자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견해로서 지난 6월 22일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떠오르는 디지털 경제 II'라는 특별보고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정보기술(IT)산업이 미국의 경제성장분 중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는 2006년에는 미국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정보기술 관련업계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중하기로 유명한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알렌 그린스펀도 최근 그의 의회 증언에서 "정보기술 혁신이 기업운영과 가치창출의 방식을 5년 전만 해도 감히 예측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미국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자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지난 7월 24일자 Economist의 기사를 꼽을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미국 경제가 디지털 경제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무엇이 미국 경제를 환골탈태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이 기사는 "표면적으로 미국 경제는 분명 급변하고 있지만, 변화의 정도나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은 아직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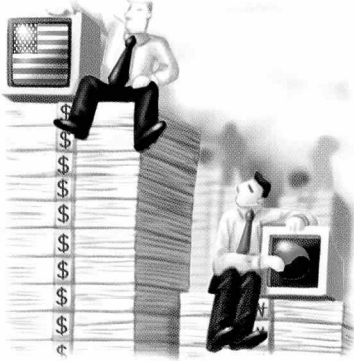
아직도 'Solow의 역설', 즉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투자가 통계적으로 생산성의 증대와 직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마저도 정보통신기술투자와 생산성과의 강한 정의 통계적 결과의 미확인은 새로운 산업시스템에 대한 생산성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아무튼 대세는 미국 경제는 이미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디지털경제시스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쪽인 것 같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미국 경제가 디지털 경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무엇이 미국 경제를 환골탈태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국은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여 철저하게 시장질서의 세계화와 과감하고 지속적인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와 이에 기반을 둔 업무혁신을 추진해 오지 않았는가. 미국 경제의 변화와 성장 구가는 이에 대한 결과일 따름이다.



특히 1991년도부터 미국은 신규투자 중 정보기술투자액(1120억 달러)이 여타 생산기술투자액(1070억 달러)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경제가 그 후 9년간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 증가 없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장과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우리도 일찍이 정부와 언론이 앞장서서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 하에 정보화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정보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할 정도다. 정보화에 대한 투자는 신경제 시스템 구축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분이나 예산이 먼저 삭감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대선 공약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80년대 말 1차 국가 기간전산망사업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성공한 사실도 있고, 또 1994년도부터 무려 45조원을 투입하는 계획과 함께 '초고속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는 인터넷의 빠른 확산과 같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정보화는 앞서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이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보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필자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안타깝고 죄스럽기까지 하다.

우선, 우리는 정보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할 정도다. 정보화에 대한 투자는 신경제시스템 구축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분이나 예산이 먼저 삭감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정보화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이는 정보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우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업 대책의 일환이 그렇고, 평가를 잘 받아 체면 손상이 없도록 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정보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년도 예산도 다른 용도 때문이라는 이유로 정보화 예산은 별 저항도 없이 형편없이 줄어들 모양이다. 이에 대한 지도층의 재고가 요구된다.

정보화 투자가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직결되는 정책이나 사업과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보화는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도를 한껏 높이고 또한 시·공간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축할 경우에만 그 성과가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파기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투명한 것이 싫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몰라서, 내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니까 등등... 정보화는 기관단위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주변 업무가 아닌 핵심업무를 우선해서 정보화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겨 봐야 한다.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구축사업, 조달업무 정보화, 예산 등 돈의 흐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기업의 전자거래시스템, 학교 정보화 등에서 정보화가 안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지지부진하다면 그 까닭을, 그리고 그려지고 있다면 또 부분만을 그리고 있지 나 않는지를 이제는 찾아서 풀어야 한다.

또한 정보화는 아무 것이나 전자화(digitization)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철저한 업무재설계와 정보화가 맞물릴 때만 정보화는 신경계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도구가 없이 경쟁터에 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간혹 무디거나 엉뚱한 도구를 가지고 참가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사례는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컴퓨터 구입 따로, 통신 따로, 규격 따로, 너 나 따로 하지 말자. 정보화가 경제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필요조건은 컴퓨터 등 각종 단말기와 통신이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연결되고 이 위에서 교육, 기업활동 및 거래, 정부서비스의 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이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